

개헌은 단임 실현, 올림픽 이후에!

- 우리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헌정 절차에 따른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전통을 세우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한번도 실행해 보지 못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사상 처음으로 이룩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요 이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화요, 민주정치 발전의 지름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개헌을 하더라도 현행 헌법 제정 당시의 전체 국민 여망인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한 후에 해야 합니다. 다시는 과거와 같은 혼란으로 인해 민주도약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 그리고 어떠한 정치활동도 장내에서, 국회에서, 대화를 통해 펼쳐져야 합니다. 선진외국을 팔면서, 사대를 밥먹듯 하는 일부 정치인은 선진외국이 하는 진지한 장내 정치는 왜 본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 지금 우리는 아시아경기대회, 그리고 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두 대회가 우리에게 국가 도약과 민족 발전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개헌이나 선거로 우리 사회가 편이 갈리고 국력을 소모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좌절과 낙망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시대는 정치·경제·사회·안보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민족 전진의 걸음을 늦춘다면, 각박한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낙오되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정을 기하고, 모두의 뜻을 합한 다음, 여유있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슬기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 개정은 신중 해야 한다

- 지금 여·야 간에는 헌법문제를 두고 여측은 개헌을 하되 신중하고 순리대로 할 것을 주장하고, 야측은 조급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개헌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우리 헌법은 제정 이후 72년까지 7차례나 개정되었으나, 번번히 특정 당파의 당리당략에 따라 성급하게 서두른 나머지 그 결과가 좋지 못했으며, 그렇게 조급하게 고쳐진 헌법은 결국 장기집권과 민주후퇴만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 현행 헌법은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거울 삼아 오랫동안 연구하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개정된 것이며, 이 나라 민주 정착의 확고한 바탕을 마련키 위해 대통령단임제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기집권의 악순환을 결단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 헌법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여·야 간의 헌법문제 논의에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개헌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내용도 제대로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재야 정치세력은 무조건 개헌을 서둘러 하자고 역지를 쓰고 있으며, 더구나 정치와 무관한 일부 세력까지 헌법의 본질도 모르면서 그들에 부화뇌동하고 있습니다.
- 헌법은 나라의 기본법입니다. 감정적인 이유에서 즉흥적으로 성급하게 고쳐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따라서 헌법을 고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 지금 우리들은 두 갈래 선택의 길목에서 있습니다. 한번도 못해 봤던 대통령단임제를 실현한 다음에 신중한 연구를 거쳐 개헌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의 정권욕만을 채워 주기 위해 서둘러서 조급하게 개헌을 함으로써 과거의 불행했던 개헌사를 또 다시 반복해야 합니까?

개헌보다 더 소중한 평화적 정권 교체

- 헌정사상 한번도 이루어보지 못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것은 이 나라 국민 모두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평화적 정권교체야말로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가져오는 첫번째 조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우리 헌정사는 특정 개인의 집권욕으로 인해 몇차례나 수난을 겪어야 했고, 이 때문에 민주정치는 퇴보를 거듭해 왔습니다. 단임 실현은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수립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의 결정적 계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 따라서 단임 실현에 자칫하면 장애가 될 수 있는 개헌을 앞 세우는 주장은 정치 선진화라는 역사발전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우둔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대통령 단임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민주정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굳은 결단, 또 이를 가능케 하는 정치·사회적 안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만일 이 시점에서 단임의 전제가 되는 안정이 성급한 개헌때문에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가져 온다면 우리 헌정사 최초의 소중한 단임정신마저 위협받게 될 우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이 나라 정치사는 퇴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 진정으로 민주발전을 위하고, 잘못된 헌정사를 되풀이 하지 않는 개헌이 되려면, 반드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수립한 후에 해야 할 것이며, 개헌추진도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며 국민을 선동하고 혼란을 조성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정치의 본 마당인 국회에서 대화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연구와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 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있을 개헌은 어느 특정 정치인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정 당파의 주장만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의 개헌은 국민 모두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 또한 쉽사리 고쳐지지 않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지속 될 수 있는 헌법이어야 합니다. 21세기를 대비하여 젊은 세대의 이상과, 국가도약기의 국민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질서도 여기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기 때문에 개헌의 준비와 실행은 충분한 시일을 두고 많은 사람의 지혜를 동원하되 모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을 마시는데도 나뭇잎을 띄워 주던 옛 조상님의 지혜를 생각해야겠습니다.

평화적 정권교체나, 혁명적 정권탈취나?

- 여당은 먼저 단임을 통한 민주 안정을 달성한 후에 훌륭한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만사 제쳐두고 개헌부터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개헌을 들고 나와 정치 싸움판을 벌여 평화적 정권교체를 못하게 하고 이 혼란속에서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스스로의 이득만을 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올림픽의 성공은 여·야 없이 모두가 바라고 있는 국가대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금년 개헌, 내년 선거는 결국 올림픽 때까지 정치투쟁과 분열, 혼란을 지속시켜 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없게 하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 개헌안은 반드시 여·야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종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것입니다. 개헌은 여당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헌법이 존재하는 한 개헌은 반드시 합헌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야의 합의로 해야 할 개헌을 특정 정치인 한사람 단독으로 밀어 부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독재발상이요, 혁명적 수법인 것입니다.
-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를 갖지 못한 일부 야당이 연내 개헌과 87년 대통령선거와 같은 제멋대로 만든 억지 정치 일정을 관철하려 하는 것, 그것도 국회가 아닌 거리로 나와 부르짖는 것은 결코 이성있는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그것은 기본적으로 재야 특정정치인이 당리당락 차원에서 정권욕을 조급하게 달성하겠다는 것이며, 극단적 개헌 논의로 사회혼란을 일으켜 과거와 같은 헌정 중단을 초래함으로써 혁명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거머잡자는 속셈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무릇 정당은 책임정당, 정책정당이 되어야 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을 담당할 수 있는 수권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야당은 정권욕에만 집착하여 성급하고 무리한 개헌주장을 외치기 보다는 국민생활을 살찌게 해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